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차질, 지원단 정상화해야”

최영심 도의원 “지원단장 부당한 파면, 피해는 아이들 몫으로… 단장 복귀” 촉구 도, 6일까지 협의회 전북지부에 최종적으로 지원단장 복귀·지원단 정상적 운영 통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정의당)이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의 부당한 파면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며 지원단장의 조속한 복귀와 전북지원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2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 조치하면서 부당 해고에 따른 갑질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지원단장 파면으로 전북지원단은 현재 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지원단 사업



을 총괄 지도하는 관리자가 없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원단장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전북도는 지난 2월 27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협의회가 지원단장의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한 비위가 계약해지라는 중징계 정도의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하며 “3월 말까지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전북지원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협의회 전북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했고, 3월 23일 전북지원단 정상 운영을 재차 독촉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도의 의결도 무시한 채 지원단장의 파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최 의

원은 협의회 전북지부의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단장 부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전북지부는 하루빨리 지원단장을 복귀시키고 전북지원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협의회 전북지부에 최종적으로 4월 6일까지 전북지원단장 복귀 및 지원단의 정상적 운영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진성 기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신고는 1366으로… 경찰·방심위와 협조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여성인권진흥원 주도 삭제·심리·수사 지원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24시간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53-8994)로 연결되며 성착취물을 삭제, 상담과 수사 지원을 제공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골자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특별지원단)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여가부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연 긴급 대책회의의 결과로 구성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내 80여명의 변호인단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변경이나 수사기관 일대일 동행, 무료 법률 지원을 원하면 지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단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 23개소로부터 의료기관과 연계된 심층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성폭력상담소 65개소로부터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내 80여명의 변호인단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변경이나 수사기관 일대일 동행, 무료 법률 지원을 원하면 지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66으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330건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3월 27일까지 총 4086건의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했다.

여가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사전에 신중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도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스

“후보자토론회 꼭 보시고 투표하세요”

전북선거방송토론위, 3일부터 9일까지 TV토론회 방송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진안군수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사전투표기간 전일인 4월 9일까지

‘후보자 TV토론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를 KBS전주와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토론회 개최 후 연이어 초청의 후보자 연설회를 KBS전주와 전주MBC를 통해 중계방송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유튜브 및 네이버TV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진안군수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비 감사원 전면 감사를”

김중희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 위원회 구성 제안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중희 의원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주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중희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4조 4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새만금이 역설적이게도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김의원은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았지만 새만금은 단 한번도 냉정한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개발 반대세력’, ‘전북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지났지만 전북과 도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뒤를 이을 대형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새만금은 외지 재벌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이었다”며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공사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17개사가 외지 재벌 토건 회사였으며 이들이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을 독식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5271곳에 첨부

“벽보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5271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

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찰 선거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관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신영대,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상덕)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시도 의원들과 함께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조선, 자동차 관련 등 관내 입주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은 지역 입주기업들을 대표해 군산조선소 기동중단과 지열 군산공장 폐쇄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지역의 현실을 호소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영대 후보는 “오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영자협의회 입주기업 대표들과 민주당 시도 의원들 그리고 군산 시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 경제 위기 극복이다”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한병도 “코로나19로 조용한 선거 운동 동침”

제21대 총선 익산시에 지역을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1일 “중앙당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잔잔한 로고송과 울릉 없는 지지연설 등 “조용한 선거운동”을 4·15 총선 운동의 기조로 세운바 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닐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만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기운을 북돋아 드리는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총선참 참배 후 본격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1일 오전 10시 30분 정읍시 충무공원 총선참배를, 오후 2시에는 고창읍 총선참배를 연달아 찾아 참배하고 이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본선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정읍과 고창의 총선참배에는 김철수·김대중 도의원과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고창 총선참배에는 성경찬·김민기 도의원과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함께 정읍·고창선대위 한명수·박문화·강대봉·최강선·김원봉 삼임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이겨 10년 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읍과 고창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뚝이 되는 농어축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관광시스템을 만들어 유동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윤 후보는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부창대교 건설과 한빛원전 안전성 강화,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의 내실화 등 10년 묵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어르신·여성·다문화가정·장애인·청년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의향으로서 문화와 예술, 교육, 체육을 진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법무부 검찰 착수하라”

박광은 최고위원, 검찰·언론 유착 의혹 보도에 MBC, ‘불법투자’ 이철 인용해 의혹 제기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검찰과 언론사 기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검찰에 나서거나 대검찰청에 검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거나 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BC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설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명에 맞게 법적 또는 윤리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불법 투자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불법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체널A 소속 기자가 접촉해 유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론 인사들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이철 대표에게 밝히며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다고 전해 감·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과 해당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일축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MBC에 제보한 이 전 대표측 사람들의 말이 허위거나, 해명 자체가 허위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보도 중 기자와의 대화를 공개한 이 전 대표측 주장을 전하며 “거래”라는 음모적 언어가 내용에 들어있어서 정상적 취재는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관련 내용이 보도됐고 특히 취재가 시작된 무렵에 검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자문된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아도 들은 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선 “철저하고 엄정한 자체조사를 통해 민에 하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스